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3년 1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왕민호, 주명선 사무관(02-2110-5407)		

신·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 원천 차단된다 !

– 보급사업의 실효성 제고로 보급목표와 시장창출에 기여토록 개편·운영 –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신·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·복합지원을 신설하고,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, 건물지원, 지역지원으로 개편함.

* (그린 홈 100만호) → 주택지원, (일반보급) → 건물(비주택)지원, (지방보급) → 지역지원
* 융·복합지원(신설) : 구역 복합, 에너지원 융합 등 프로그램별·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

○ 보조금 지원방식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·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.

- 또한,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.

○ 이와 같이 지식경제부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, 관련 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는 등,

* A/S 등 사후관리 민간 이양, 우수 전문기업 지정·운영, 전문기업 신고제 개선 등

- 신·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적으로 전환·육성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.

□ 이는 그 동안 신·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보조금·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설비인증·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운영을 통해 총 32만 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성과를 이루었으나,

* 320,320TOE : 일반가정(350kWh/월) 37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
* 신·재생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의 시행('08~'10년 : 2조818억원)으로 총 30,065개 일자리 창출과 높은 취업효과 달성(취업유발계수<10억원당> : 신재생 기술개발·보급정책은 20명 > 전 산업 평균은 14명)

○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있는 에너지원 보급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.

*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 미흡,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 부족, 사후관리체계 부실,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·브로커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 등

□ 세부적으로,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

○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, 설치확인 업무, A/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하도록 하고,

- 부품 표준화·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,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,

- 정부는 보급된 설비의 가동현황과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임.

○ 아울러,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,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,

* 우수 전문기업 지정 : 기술역량, 관리역량,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전문기업을 지정하고, 정부사업 우선 참여기회 제공
* 컨소시엄 : 시공에 대한 설치 확인, 성능검사, A/S와 사후관리 등을 컨소시엄 참여기업간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하여 제품의 성능과 서비스 질 제고

- 전문기업 등급제를 도입하여 국민들과 신청 희망자들에게 설비의 현황과 우수 전문기업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임

* 전문기업 등급 : 시공능력, 설비운영, A/S 만족도, 관리역량, 보급사업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(3~5단계)하여,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

○ 또한, 중·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,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·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.

* 융자 : 직접대출 방식 도입 검토, 세제 : 세액공제 대상 확대(태양열·연료전지 등), 기간('13년말 일몰) 연장, 공제율(10%) 상향 등
* 생산량 지원 : 설치된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(소유자의 설비에 대한 유지·관리 업무를 자발적·적극적으로 참여 유도)
* 도서 융·복합 : 도서지역의 현행 디젤발전에 대하여 신·재생에너지로 대체 또는 보완하는 융·복합 프로그램 개발·지원

□ 지식경제부는 금번에 수립된 "신·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"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,

- 관련 규정을 이번 달에 개정·고시하였으며, 관련 법령도 금년내로 개정하여 공포·시행한다는 방침임.

* 고시 : "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"
* 법령 : "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시행령, 시행규칙)"

□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"금번 신·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창출·육성시킨 신·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"이라고 말하면서,

○ 앞으로 정부는 신·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"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신·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"임을 밝혔음.

< 참 고 >

신·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 주요 내용

1 추진배경

□ 신·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은 보조(그린홈, 일반, 지방) 및 융자로 구분·운영 중이며, 국내 보급량 확대와 관련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

* 신·재생 보급량('07~'11년)은 7.6백만TOE로, OECD 국가 중 증가율 10위
* 연평균 성장률('07~'11) : 민간투자 61%('11년 4.7조), 해외수출 60.1%('11년 5.1조$)

□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, 신·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그 동안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관리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

○ (성과) 정부의 보급정책은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'93년부터 2조7,701억원을 투입하여 32만TOE의 보급량 달성

○ (평가) 취업유발효과가 10억원당 20명으로 전 산업평균(10억원당/14명)보다 높으며(고용부 고용영향평가), 산업육성·보급확대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나 정부지원이 필수적(기재부 재정평가)

○ (문제점)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 미흡,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 부족, 사후관리체계 부실,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·브로커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 등 문제점 발생

2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

1 보급사업 체질 강화

○ **(보급사업 지원영역 조정)** 현행 보급사업의 체계를 주택지원, 건물지원, 지역지원으로 개편하며, 융·복합지원 신설

현 행		
사업명	지원대상	사 업 명
보급사업	단독, 공동주택	그린홈100만호
	건물, 시설물, 시범	일반보급
	지자체 건물·시설물	지방보급
	(신설)	

⇒

조 정		
사업명	지원대상	프로그램명
보급사업	단독, 공동주택	주택 지원
	건물, 시설물	건물 지원
	지자체 건물·시설물	지역 지원
	구역형,패키지형,시범	융·복합 지원

○ **(보조금 산정·지원방식 개선)** 보조금 산정을 설비가액 정율 보조에서 원별·용량별 정액보조로 개편

- 적정금액 지원을 위해 설비가격도 가격변화를 예측·반영

○ **(건전성 제고)** 주택·건물지원은 신청자가 전문기업을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, 지역지원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

○ **(중·장기 보급 로드맵 구축)** 기술·사회·경제적 요건 등을 반영한 보급 잠재량을 도출하고, 투자회수기간을 추정하여 중점 보급대상 에너지원·지원 규모 등에 대한 연차별 보급 로드맵 작성

2 A/S의 민간 책임성 강화 등 사후관리 개선

○ **(시공기준·설치확인 시장중심 전환)** 전문기업이 세부적 시공방법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전환하며, 설치확인 업무를 우수 전문기업에게는 자체 확인토록 허용하는 등 민간 이양 확대

○ **(A/S에 대한 민간참여 유도)** 설비 소유자에 대한 유지·관리 교육을 강화하고, 표준화·공용화를 통한 A/S 전문기업 육성, 전문기업 선정 시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정부사업에 반영 등

○ **(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)** 저용량(가정용 등) 설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며, 단기적('13~'14)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유도하되, 중장기적('15~)으로 일정용량 이상 전 보급사업 의무화

3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구축 제고

○ **(전문기업 지정·등급제 도입)** 기술역량과 관리역량,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정부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에 활용하고, 추후 등급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정보제공

○ **(전문기업 신고제도 개선)** 전문기업 신고서 발행 시 3년 유효기간 설정, 신고 전문기업에게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(년 1회 이상)

- 정부사업 사업내용 등 위반 시 보급사업 참여 제한기간 강화(3년 → 5년)

○ **(컨소시엄제 도입)** 제조기업과 설치기업의 전국망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 설치 확인, 설비 성능검사, 사후관리 등 유도

○ **(사업관리 시스템 구축)** 사업성과, 정보 등의 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, 보급사업의 전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

4 산업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(장기 과제)

○ **(민간참여 촉진 지원 프로그램 개선)** 정부 융자사업 위탁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(1.5%) 인하 유도와 전담기관이 직접 대출하는 방안 도입 검토

-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(태양광·풍력·수력) 확대(태양열·연료전지 등), 일몰시점('13년말) 연장, 투자세액 공제율(10%) 재검토 등

○ **(신규 보급지원 프로그램 개발)** 초기투자 보조금 지원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의 전환 검토

- 발전원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을 신·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융·복합 프로그램 개발 등

3 향후 추진계획

○ '13. 1중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고시)」 개정

-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센터 규정)」 개정 승인

○ '13. 2초 '13년 보급사업 공고와 사업 착수